
「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(시안)」

2019. 8. 14.

교 육 부
[고등교육정책과]

I. 추진 배경

□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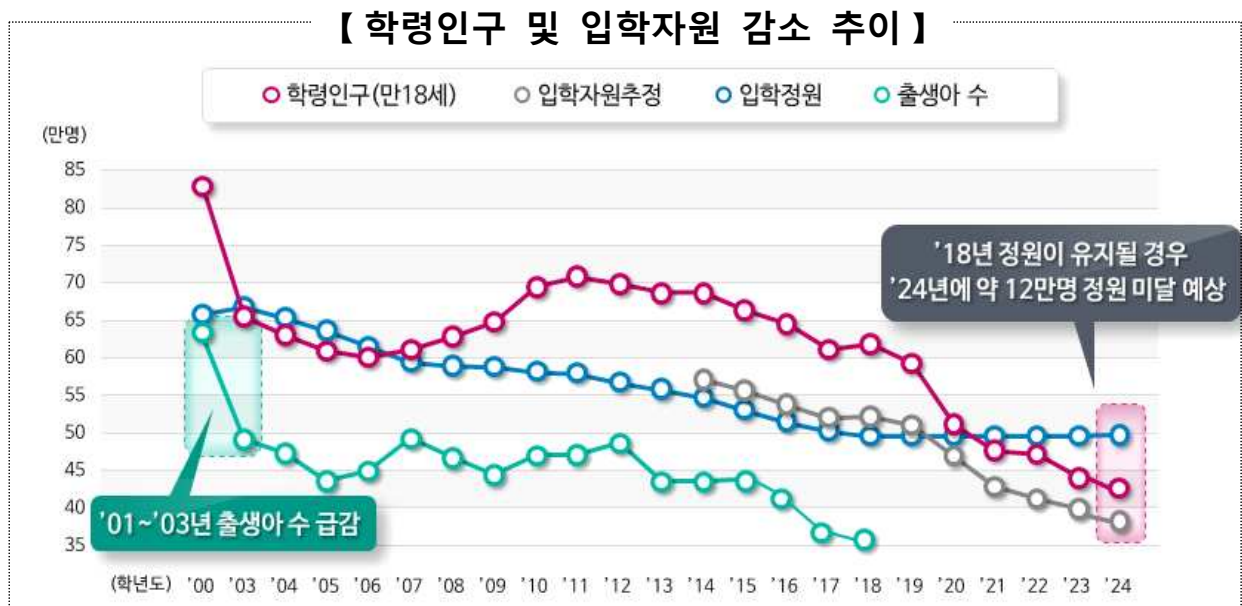
- 단순 지식이 아닌 문제해결력, 창의성과 전공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함께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

※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적응기술(adaptive skills)을 키워주는 교육시스템 평가에서 스위스 1위, 미국 4위, 일본 5위이며 한국은 19위에 불과('16.1, UBS)

- 고령사회 진입, 지식·기술의 변화 주기 단축 등에 따라 성인에 대한 재교육 수요도 증대되는 시점

☞ 미래 사회 변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교육 역량을 키우는 질적 개선 노력 필요

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·전문대학의 위기 심화



-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 발생

※ '18학년도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, '24학년도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이 약 1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('18학년도 대학 정원: 497,218명, '24학년도입학자원(추정): 373,476명)

☞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등 대학의 자체적 정원 조정 기제 및 학사구조 개편 필요

Ⅱ. 그간의 경과

□ 「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」 발표('14.1.)

- 구조개혁 추진 기간을 3주기(3년 간격)로 나누어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등과 연계 추진

□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: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

- (대학 평가) 전국 단위로 A~E등급을 구분하고 A등급 제외 대학(평가 대상의 85.4%)에 정원 감축 권고(24만 명),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 부재
- (정부 재정지원사업)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(CK) 및 사회 수요 맞춤형 정원 조정(PRIME) 유도, 정원 감축과 연계(22만 명 감축)

☞ 학생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, 모든 대학 대상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(4.6만 명)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의견

□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: 정부 주도 정원 감축 기조 완화

- (대학 진단) 정부의 감축 권고*와 대학의 결정,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고, 진단과 재정지원 연계 시작
- * 역량강화 진단제외·재정지원제한대학(진단 대상 대학의 36%) 대상으로 1만 명 감축 권고
- (정부 재정지원사업) 다수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통합·개편하여, 대학이 스스로 혁신 방향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

* '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: 자율협약형 7,770억 원, 역량강화형 406억 원

☞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,

- 모든 대학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, 복잡한 진단 기능에 따라 대학 유형을 구분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이 과도*하다는 의견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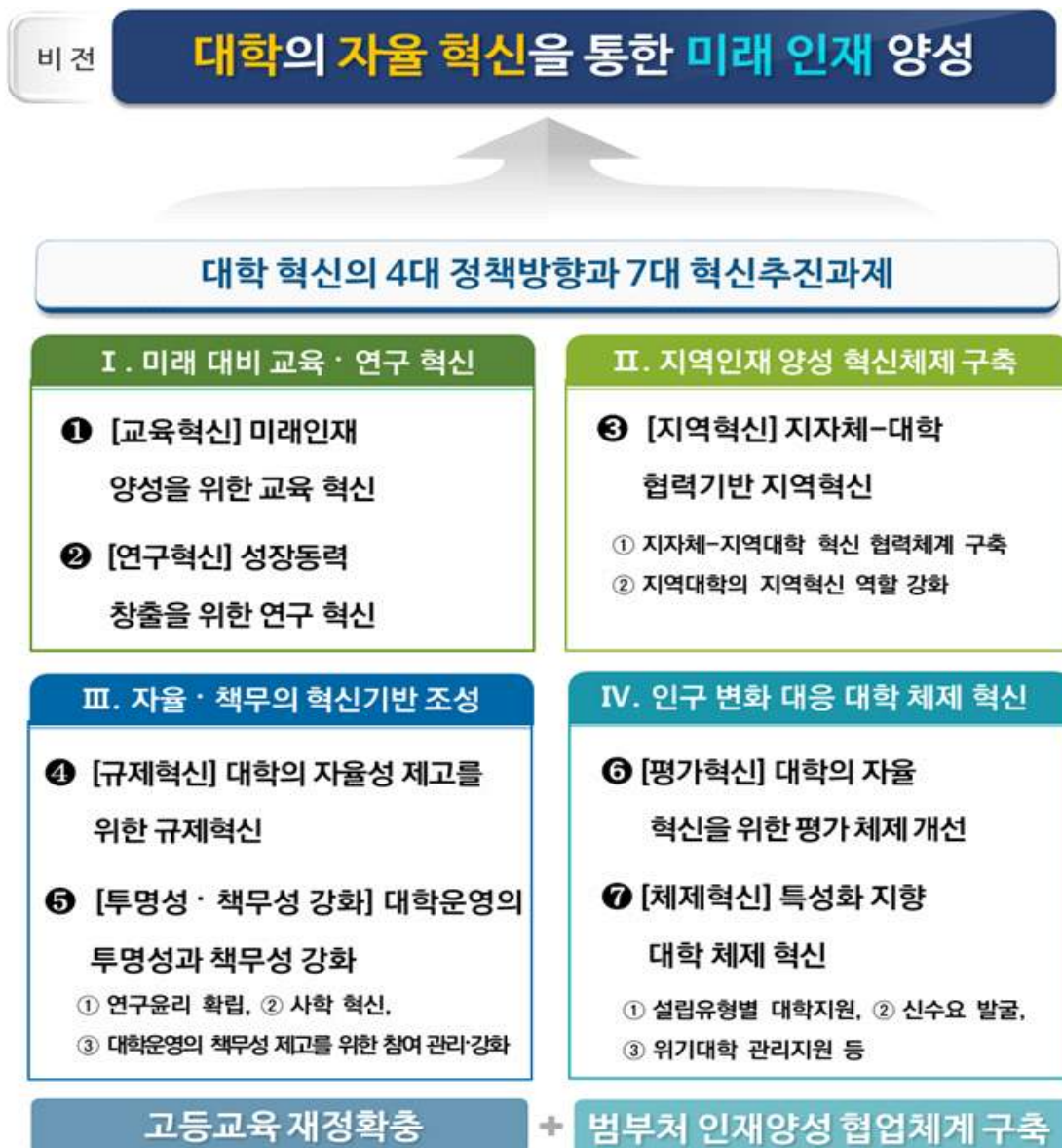
* 대학 평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교협·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있고, 일부 대학(역량강화대학)에 대한 별도 선정 평가를 거쳐 재정 지원

□ 「대학혁신 지원 방안」 발표('19.8.6.)

-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 제안

【「대학혁신 지원 방안」 주요 내용】

- ❖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“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,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”로 설정하고,
 - “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”이란 비전 하에 4대 정책 방향과 7대 과제를 제시
- ❖ 대학 혁신의 4대 정책방향 및 7대 추진과제



Ⅲ. 「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」 추진방향

【「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」 추진방향】

❖ ‘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’은 「대학혁신 지원 방안」에서 제시한 고등교육 정책방향 하에서,

- 대학 규모의 적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여 추진

고등교육
정책방향

혁신의 주체로서는 대학
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

2021년진단
추진방향

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

① 대학의 자율성 존중

-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한
적정 규모화 촉진
-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
교육의 질 제고
-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

② 지역대학 배려 강화

- 5개 권역 구분 및
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
- 충원율, 전임교원 확보율, 취업률
만점기준 권역별 분리 적용 검토

③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

- 일반재정지원 대학
선정 기제로 기능 재정립
- 단일 단계로 통합 및
지표 간소화
-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
기관평가인증 간 지표 연계

1 추진 방향

-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(이하 “2021년 진단”)은 대학의 자율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지원
- ※ 「대학혁신 지원 방안(’19.8.6.)」에 따른 지자체-대학 협력체계 구축, 설립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 육성 지원, 폐교대학 지원 등 위기대학 관리 정책 등과 병행하여 추진

2 주요 내용

□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한 적정 규모화 촉진

- 진단 지표 중 신입생·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결과를 진단에 반영
- ※ (2018년 진단) 10점(75점 만점, 13.3%) → (2021년 진단) 20점(100점 만점, 20%)
- ‘유지 충원율*’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 지속 지원
- * ‘20년 전후의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하여 ’21.4월 중에 기준 설정 및 안내 예정

□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교육의 질 제고

-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 상황* 및 권역별 만점기준 적용 검토
- * (2018년 진단) 10점(75점 만점, 13.3%) → (2021년 진단) 15점(100점 만점, 15%)
-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융합교육 등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, 교수·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진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 강화
- ※ (2018년 진단) 교양·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, 조직, 환류 등 절차적 내용 진단
→(2021년 진단) 대내·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교양·전공 교육과정 운영 관련 실체적 내용 진단

【 (예시)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진단 지표 개선(안) 】

- ▶ (발전 계획) 융합전공·학과 설치 등을 통해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 노력 등을 기술

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		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선(안)	
진단 지표	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수립·추진·성과	진단 지표	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
진단 요소 中	▶ 발전계획과 학부(과)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	진단 요소 中	▶ 발전 계획과 학사구조·학사제도 간 연계성 ※ 발전 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과(부)개편, 유연학기제, 집중이수제, 융합전공제 등 학사제도 개선 실적 기술

- ▶ (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) 미래사회 변화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내·외 여건,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핵심역량 설정 및 교육과정 운영 실적, 교수·학습 방법 개선 제도 및 우수사례 기술

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		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선(안)	
진단 지표	교육과정·강의 개선	진단 지표	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
진단 요소	▶ 교양·전공 교육과정 개선 - 규정·절차의 체계성·구체성, 환류를 통한 개선 노력 ▶ 교양·전공 교과목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	▶ 교양·전공 교육과정 운영 - 핵심역량의 설정, 교과목 운영·환류의 적절성	▶ 교수·학습 방법 개선 체제 구축 및 운영 - 교수·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, 우수사례 등

□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

- 모든 대학을 동시에 진단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

2

지역대학 배려 강화

① 추진 방향

-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·지원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 강화

2 주요 내용

□ 5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선정

- 우수한 지역대학 선정·지원을 위해 5개 권역*을 구분하고,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

* 2018년 진단, 타 재정지원사업의 권역 구분 등에 따라 5대 권역으로 구분

구 분	권 역
전문대학	수도권 / 강원·충청권 / 대구·경북권 / 호남·제주권 / 부산·울산·경남권
일반대학	수도권 / 대구·경북·강원권 / 충청권 / 호남·제주권 / 부산·울산·경남권

- 2021년 진단은 권역과 전국 선정 비율을 2018년 진단의 '권역 : 전국 = 5 : 1' 보다 확대하여 '권역 : 전국 = 9 : 1' 적용

□ 진단 지표에서 지역대학 배려

- 충원율, 전임교원 확보율,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·비수도권, 권역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소재지역의 여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

【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(「대학혁신 지원 방안」)】

- ❖ 「(가칭)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」 신설 예정
 -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 수립·추진
 - 지역내 대학별 기능·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산업 발전 촉진
- ❖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
 -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, 고등교육 기회 보장, 기초·보호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
- ❖ 「(가칭) 전문대학 혁신방안」 수립 추진
 -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을 정립
- ❖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
 -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비수도권 전문대학(만 25세 이상)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(만 30세 이상)으로 확대 추진
- ❖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확대

1 추진 방향

-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재정립
- 대학 현장의 평가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
 - 대학의 예측 가능성을 감안하여 2018년 진단의 지표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되, 진단 단계 통합 및 지표 간소화
 - 2021년 진단과 대교협·전문대교협이 실행하는 기관평가인증(이하 “인증”) 간 유사 지표 등 연계 추진

2 주요 내용

□ 진단의 기능 재정립

- 2021년 진단 결과를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하고,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로 지정
 - 기존 진단은 일반재정지원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, 정원 감축 등 여러 기능을 부여하여, 대학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의견
 - 이에, 대학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요구를 반영하여 진단의 기능 재정립

□ 재정지원제한대학 별도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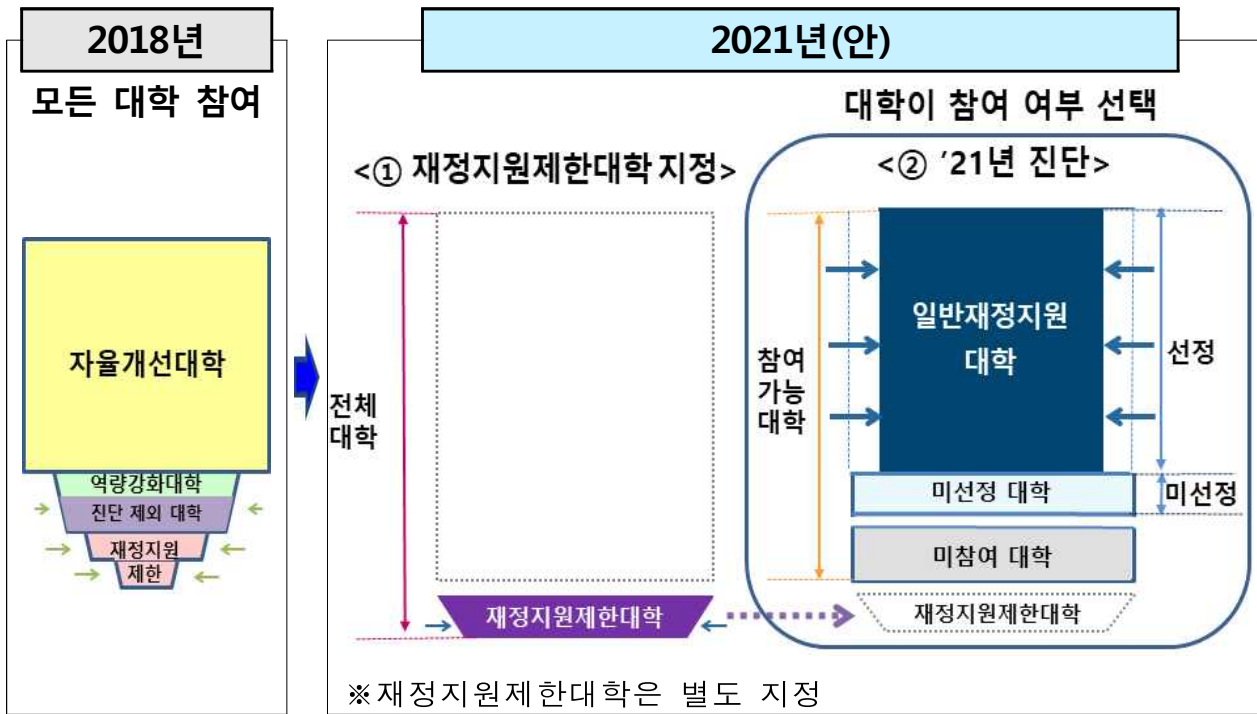
-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·성과,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* 지정

* (법적근거)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11, 제49조의3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

※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책연구, 대학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'19년 연내 확정·발표

-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에 참여를 제한
- 다만,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여 대학의 자구 노력 유도

※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시 2021년 진단 미참여 대학 수준의 재정지원 가능



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】

대학 구분			일반재정지원 (대학혁신지원사업)	특수목적 재정지원 (국가, 지자체)	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
2021년 진단	참여 대학	선정 대학 (일반재정지원대학)	지원	신청 가능	지원
		미선정 대학	제한	신청 가능	지원
	미참여 대학		제한	일부 제한*	지원
진단 참여 자격 제한 대학 (재정지원제한대학)			제한	제한	제한

*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
(국가·지자체 공동 사업은 사업 취지,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판단)

□ 진단 단계 및 지표 간소화 →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 완화

- (단일 단계로 통합) 진단 기능 재정립에 따라 역량강화·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1·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

※ 단일 단계로 시행할 경우, 정량적 정성 진단 실행 시기를 대학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(대학별 정량 지표 진단('21.5.) 이후 정량적 정성 지표 진단(6~7월) 실시 가능)

- (신규 지표 추가 최소화) 대학의 예측 가능성 및 평가 준비 부담 고려

- (지표 간소화) 2018년 진단 지표(요소)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*으로 지표(요소) 간소화

* 고려 사항: 정량적 정성 지표(요소)를 ① 지표(요소)의 변별력, ② 다른 지표(요소)와의 중복성, ③ 대학의 수용도 등

- (일부 지표 삭제 및 통합)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의 이행 기제가 있는 지표는 삭제(교사 확보율, 장학금 지원)하고, 지표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표 통합(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, 지역사회 협력·기여를 '발전계획의 성과' 항목에 통합)

* 2021년 진단에 장학금 지원 지표(장학금 지급률)를 포함하지 않으나,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조건(1인당 교내장학금)은 현행 유지

- (진단 요소 및 주안점 개선) 보고서 작성 부담과 직결되는 진단 요소 및 주안점 수를 대폭 축소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 경감

【 진단 지표, 진단 요소, 진단 주안점 등 비교 】

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					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선(안)				
일반대학	구분	진단 지표	진단 요소	진단 주안점	→	구분	진단 지표	진단 요소	진단 주안점
	1단계	15	39	75		단일 단계	13	34	56
	2단계	5	14	32					
	합계	20	53	107					
전문대학	구분	진단 지표	진단 요소	진단 주안점	→	구분	진단 지표	진단 요소	진단 주안점
	1단계	16	43	80		단일 단계	14	37	62
	2단계	5	16	40					
	합계	21	59	120					

□ 2021년 진단과 인증 간 지표 연계 → 이원화로 인한 평가부담 완화

- 진단과 인증 간 유사 지표(요소)에 대한 지표, 산출식, 작성 서식, 증빙자료 등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 협의하여 연내 확정

※ 진단·인증 간 유사 지표(요소)

- (정량 지표) 전임교원 확보율, 강사 보수수준 등
- (정량적 정성 지표) 발전 계획,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,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, 학생 학습역량 지원, 진로·심리상담 지원, 취·창업 지원, 산학협력(전문대학) 등

Ⅳ.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세부 추진 계획(안)

1

진단 실행

① 진단 대상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, 2, 4호(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) 중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(분교 / 본교 구분)
 - 다만,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진단에 참여 불가

② 진단 방식

□ 진단 단계 및 지표별 진단 방식

- 대학(학부교육)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진단 지표로 구성하고, 단일 단계로 진단 실시
 -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
- (정량 지표)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에 대해 절대평가로 만점에서 감점을 하는 방식
 - 만점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여 대학의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고,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 완화

※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, 진단·인증 지표 연계 등에 따라 추후 만점기준 변경 가능
- (정량적 정성 지표) 유사한 지표로 지표팀(3~4개팀)을 구성하고, 1개 지표팀(15명 내외)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(서면 및 대면 진단*)
 - * 2018년 진단은 1·2단계 진단으로 실시하여 1단계는 서면·대면 진단, 2단계는 서면·현장 진단을 실시하였으나, 2021년 진단은 단일 단계로 개선함에 따라 서면·대면 진단으로 실시
 - 진단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, 진단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 점수 산출

정량 지표 진단		정량적 정성 지표 진단		
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로 결과 산출(진단주관기관)	+	지표별 진단팀(3~4개팀) 서면 및 대면 진단	=	진단 결과

□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방식

-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균형을 고려하여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
- 2018년 진단 및 타 재정지원사업의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일반대학·전문대학을 각각 5대 권역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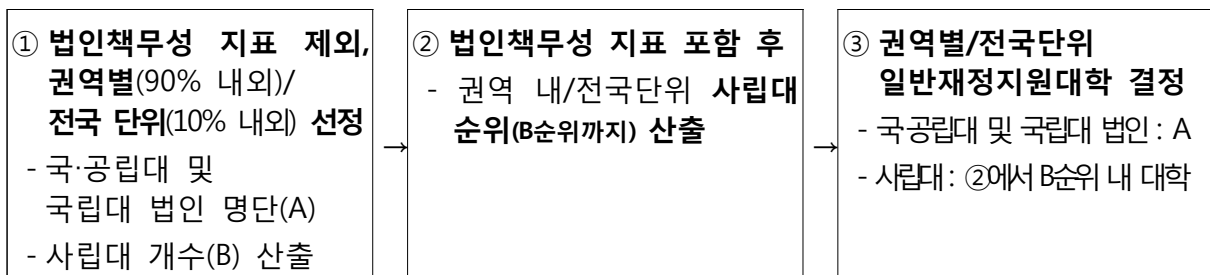
구 분	권 역
전문대학	수도권/강원·충청권/대구·경북권/호남·제주권/부산·울산·경남권
일반대학	수도권/대구·경북·강원권/충청권/호남·제주권/부산·울산·경남권

※ 캠퍼스 분리 대학 중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진단 대상 기간 동안

- ① 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%를 초과하거나, ② 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

-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전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중 90% 내외를 권역별로 선정 후, 10% 내외를 전국 단위로 절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

【 권역별/전국 단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과정* 】



* 법인 책무성 지표(사립대학 대상)로 인해 국·사립대학 총점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

□ 감점 사항

-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를 미이행한 대학에 대해 202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진단* 시에 감점 등 페널티 적용

* 2021년 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비율에 따라 최대 4점까지 차등 감점

- 부정·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등 제재 적용

※ 2021년 진단 관련 부정·비리 제재 적용 방안을 별도 마련

- 충원율 등 허위·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 강화

- 진단과정 중 허위·과장 발견 시, 허위·과장 수준을 고려하여 감점
- 허위 작성 수준이 중대한 경우, 진단 시행 후 허위·과장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구조위 등 심의를 통해 감점, 등급하향 등 적용

1 진단 지표 개요

- 2018년 진단 지표 및 요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(요소) 간소화
- 지표별 특성에 따라 설립, 지역, 또는 계열을 구분하여 적용하고, 정량적 정성 지표의 경우 규모*를 고려
 - *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해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위원회 대학별 개황 자료를 제공하며, 특히 조직 및 인력 구성,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규모 대학(편제정원 1,000명 미만) 고려
-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 구성
- 진단 자료는 2018년 진단 이후 3개년* 자료 활용 원칙
 - * 정량적 정성 지표는 2018~2020학년도 자료, 정량 지표는 최근 3년 간 공시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일부 지표는 특성에 따라 자료 기준 시점 상이
- 캠퍼스 분리 대학은 특정 캠퍼스에 편중·누락되지 않도록 작성

2 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개선 사항

□ 지표체계의 단순화

-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개선함에 따라 단일 단계로 통합(100점 만점)
 - ※ (2018년 진단) 1단계(75점 만점) 결과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, 자율개선대학 외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(25점 만점)를 실시하여 역량강화·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

□ 지표 간소화

- (신규 지표 추가 최소화) 대학의 예측 가능성과 평가 준비 부담을 고려
- (일부 지표 삭제 및 통합)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의 이행 기제가 있는 지표는 삭제(교사 확보율, 장학금 지원)하고, 지표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표 통합(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, 지역사회 협력·기여를 '발전계획의 성과' 항목에 통합)
- (진단 요소 및 주안점 개선) 보고서 작성 부담과 직결되는 진단 요소 및 주안점 수를 대폭 축소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 경감

□ 지표 개선 사항

- 대학 자율 혁신 노력(정원 조정,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 등) 유도
 - (신입생·재학생 충원율) 충원율 배점을 대폭 확대*하여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촉진
 - * (2018년 진단) 일반대학 10점, 전문대학 8점 → (2021년 진단) 일반대학·전문대학 20점
 - (발전계획) 발전계획과 연계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 노력 반영
 - (자율 지표) 자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다른 진단 지표 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, 비전 등과 관련된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

○ 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

- (법인 책무성) 대학 운영과 관련된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최근 3년 실적* 점검 및 배점 확대
 - * (2018년 진단) 신규지표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확보 계획을 진단
- (구성원 참여·소통) 법령상 위원회 구성·운영 실적*을 진단하고, 대학 구성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우수·개선사례를 포함
 - * (2018년 진단) 신규지표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진단
 - ※ (2018년 진단) 일반대학·전문대학 1점 → (2021년 진단) 일반대학 5점, 전문대학 3점

<구성원 참여·소통 관련 사례(예시)>

- 대학평의위원회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
- 개방이사 선임 시 구성원 대표단체(대학평의위원회 등)에 추천권 부여
- 총장 선임 관련 투명한 절차 운영 및 구성원의 참여 수준 확대
- 회계·재정 관련 위원회 구성·운영 시 구성원의 참여 확대
- 학내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노력
- (예시) 2018년 진단 결과 관련 세부 정보

○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 및 강사 제도 안착 지원

- 대학·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 개설 수준에 대한 신규 지표* 추가
 - * (2018년 진단) 강의규모의 적절성(1점), 시간강사 보수수준(1점), 총 2점
→ (2021년 진단) 2018년 진단 지표에 ‘총 강좌 수(1.5점),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(1.5점)’ 등 신규 지표를 포함하여 총 5점
 - ※ 현재 지표(안)에 대한 정책연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산출 방식, 만점기준 등은 추후 안내

【 [일반대학]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(안) 】

진단 항목	진단 지표	배점	비고	'18년과 비교	
				변경	배점
발전 계획의 성과 (4)	<정량적 정성>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	2	규모 고려	통합	2
	<정량적 정성> 자율지표	2	규모 고려	신규	-
교육 여건 (20)	<정량/정량적 정성> 전임교원 확보율	15	국·공립/사립/ 국립대법인	-	10
	<정량> 교육비 환원율	5	국·공립/사립/ 국립대법인	-	5
대학 운영의 책무성 (9)	<정량/정량적 정성> 법인 책무성	4	사립	계획→실적	2
	<정량적 정성> 구성원 참여·소통	5	국·공립/사립/ 국립대법인	계획→실적	1
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(29)	<정량적 정성>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- 교양 교육과정 운영(7) - 전공 교육과정 운영(7) - 교수·학습방법 개선(6)	20	규모 고려	1·2단계 통합	1단계: 10, 2단계: 11
	<정량/정량적 정성>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- (정량) 총 강좌 수(1.5) - (정량) 강의 규모의 적절성(1) - (정량)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(1.5) - (정량) 강사 보수수준(1) - (정량적 정성)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(2) - (정량적 정성)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(2)	9	국·공립/사립/ 국립대법인 규모 고려	강사 관련 지표 신규	10
학생 지원 (13)	<정량적 정성> 학생 학습역량 지원	5	규모 고려	개선	5
	<정량적 정성> 진로·심리상담 지원	4	규모 고려	개선	3
	<정량적 정성> 취·창업 지원	4	규모 고려	개선	3
교육 성과 (25)	<정량> 학생 충원율 - 신입생 충원율(10) - 재학생 충원율(10)	20	수도권/ 비수도권	-	10
	<정량> 졸업생 취업률 - 졸업생 취업률(3) - 유지취업률(2)	5	계열/성별 /권역	-	4
합 계	-	100	-	-	-

【 [전문대학]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(안) 】

진단 항목	진단 지표	배점	비고	'18년과 비교	
				변경	배점
발전 계획의 성과 (4)	<정량적 정성>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	2	규모 고려	통합	4
	<정량적 정성> 자율지표	2	규모 고려	신규	-
교육 여건 (20)	<정량/정량적 정성> 교원 확보율	15	국·공립/사립	-	7
	<정량> 교육비 환원율	5	국·공립/사립	-	4
대학 운영의 책무성 (5)	<정량/정량적 정성> 법인 책무성	2	사립	계획→실적	2단계: 1.5
	<정량적 정성> 구성원 참여·소통	3	국·공립/사립	계획→실적	1
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(31)	<정량적 정성> 교육과정 운영 -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(6) - 현장 중심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(12)	18	규모 고려	1·2단계 통합	1단계: 3, 2단계: 12
	<정량적 정성> 산학협력 활동	4	규모 고려	-	5
	<정량/정량적 정성>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- (정량) 총 강좌 수(1.5) - (정량) 강의 규모의 적절성(1) - (정량)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(1.5) - (정량) 강사 보수수준(1) - (정량적 정성)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(2) - (정량적 정성)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(2)	9	국·공립/사립 규모 고려	강사 관련 지표 신규	10
학생 지원 (10)	<정량적 정성> 학생 학습역량 지원	4	규모 고려	개선	5
	<정량적 정성> 진로·심리상담 지원	3	규모 고려	개선	5
	<정량적 정성> 취·창업 지원	3	규모 고려	개선	5
교육 성과 (30)	<정량> 학생 충원율 - 신입생 충원율(10) - 재학생 충원율(10)	20	수도권/ 비수도권	-	8
	<정량> 졸업생 취업률 - 졸업생 취업률(7) - 유지취업률(3)	10	계열/성별 /권역	-	9
합 계	-	100	-	-	-

□ 일반재정지원

-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시 3년간(2022~2024년) 지원
- 정부-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관리로 지원 규모 조정 등

□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·지원 가능 범위 결정

- (진단 참여 대학)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, 선정되지 않은 대학 모두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·지원 가능
- (진단 미참여 대학)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·지원 일부 제한*

*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(국가·지자체 공동 사업은 사업 취지,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판단)

※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 불가하고,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·지원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·학자금대출 제한 적용

□ 진단 결과 정보 제공

- (대학 대상) 교육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추진 시 활용하도록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
- (학생 대상)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대학, 재정지원 가능 대학,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,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 명단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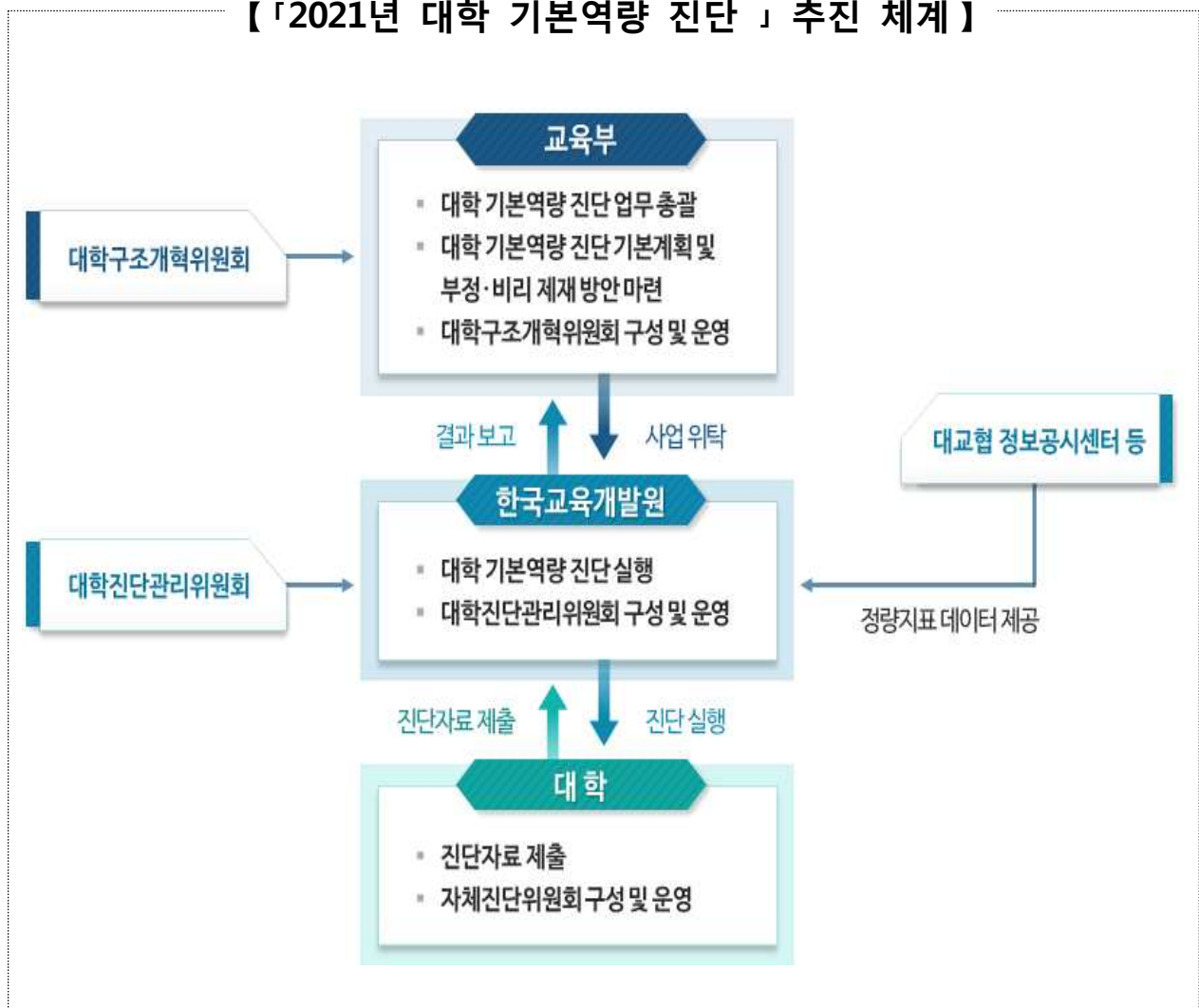
※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「한국장학재단법」 제24조의11,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 근거

V. 추진 체계

□ 추진 체계

- (교육부) 2021년 진단 관련 업무 총괄, 기본계획 및 부정·비리 제재 방안 등 수립,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·운영
- (한국교육개발원) 2021년 진단 실행,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
- (대학구조개혁위원회, 대학진단관리위원회) 2021년 진단 관련 주요 사항 심의
- (진단 참여 대학) 진단자료 작성·제출

【「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」 추진 체계】



VI. 향후 추진 계획

□ 「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」 수립

- 「2021년 진단 기본계획(시안)」 발표 및 대학 의견수렴 : '19.8~9월
- 「2021년 진단 기본계획」 확정 추진 : '19.9월
- 2021년 진단 편람 의견수렴 : '19.하반기

□ 「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」 마련

- 정책연구 실시 : '19.9~11월
- 정책연구(안)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 및 방안 확정 : '19.12월

□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행

-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발표 : '21.4월
- 2021년 진단 실행 : '21.5~7월
- 2021년 진단 결과 발표 : '21.8월

	2018년	2021년(안)
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 및 교육의 질 제고	• 평가 결과에 따라, 정부가 정원 감축 대상 대학 지정 및 감축 - 정부 차원의 정원 감축 및 학생·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조정 조화	• 대학이 '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- 대학의 자체 정원 감축 및 학생·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조정 조화 - '21년 진단 지표 중 충원율 비중 확대 - '유지 충원율'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 충족 시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 • 대학이 특성화와 연계한 학사구조, 교육과정, 교수·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제출
지역 균형 고려	• 수도권과 지방 간 편차를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,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 도입 - 권역:전국=5:1' 비율	• 5개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을 유지하고, 권역 선정 비율 확대 - '권역:전국=9:1' 비율 • 충원율, 전임교원 확보율, 취업률의 경우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·비수도권, 권역별 분리 적용 검토 - 소재지역의 영향 최소화
진단의 기능 재정립	• 복합적인 진단의 기능 ① 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후적 정원 감축, ②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, ③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• 대학의 진단 참여 선택권 없이 모든 대학 참여 원칙 ※ 종교계·예체능계 위주 대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 제외	• 진단의 기능 재정립 - (2021년 진단)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지원 ※ 진단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적 정원 감축 필요 - (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) 정량 지표로 '21년 진단 이전에 지정 •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

2018년		2021년(안)	
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	• 복수의 진단 절차(1·2단계) 운영 ※ 1단계 : 모든 대학 대상, 자율개선대학 선정 2단계 : 자율개선대학 외 대학 대상, 역량강화·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• 2018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이원화		• 단일 단계로 통합 및 지표 간소화 •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 지표 등 연계
	• 강사 관련 지표 반영 ※ 강의규모의 적절성, 강사 보수수준 등		• 학생의 강좌 선택권 보장 및 강사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지표 확대·강화 ※ '총 강좌 수,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'를 신규지표로 추가 • 자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대학의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 • 대학 운영의 책무성 강화 ※ 법인 책무성, 구성원 참여·소통 지표 강화 - 구성원 참여·소통에서 대학 구성원의 주요 의사 결정 참여 관련 우수·개선사례 등을 포함